

시론



신 춘 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임상옥(林尙沃·1779~1855)은 조선 후기 중인(中人) 출신 상인(商人)으로 평안도 의주(義州)에서 태어났으며, 본관은 전주(全州), 호는 가포(稼圃)이다. 그의 부친 임봉핵(林鳳) 역시 보부상 출신으로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상(商)을 가업으로 삼았던 듯하다.

가포 임상옥은 상재(商材)와 기지(機智), 근검절약으로 자산을 모은 거부(巨富)로 알려져 있으며, 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를 위하여 사용한 진정된 기업가정신을 실천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임상옥은 그의 고향이자, 조선 후기 지리적으로 중국과 근접해 상업 교류가 활발했던 의주를 중심으로 한 상인조직인 의주 만상(灣商)을 상업적 기반으로 성장했다.

의주는 조선의 국경 도시로 정부의 사행(使行)이 출발하고, 중국 사신이 오는 관문으로 정치, 외교 및 무역 중심지로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조선 정부가 의주상인들에게 무역 출입물품에 대한 관세 징수권과 무역권을 독점적으로 맡겨 관리하는 만포(灣包) 정책을 시행하면서 의주상인의 별칭인 만상(灣商), 만고(灣賈), 유만(柳灣)이 유래했다.

임상옥에 대한 일화는 최인호 작가의 소설 상도(商道)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데, 북경(北京) 상인들의 불매 등

상인 임상옥과 계영배

맹을 파기한 거래, 관직에 나간 후 주변의 여건이 여의치 않자 과감히 사직을 한 일, 거부를 이룬 후 빈민 구제 사업이나 재물을 전부 나눠준 일 등이 소개되고 있다.

임상옥은 “상즉인(商卽人), 장사는 곧 사람이다. 장사란 이문(利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고 했는데, 상즉인의 정신은 상인이 상을 업으로 삼으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본분과 마음가짐에 대한 지침으로 성리학(性理學)의 어원인 성즉리(性卽理)의 정신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임상옥의 상즉인 정신은 전통 주자학(朱子學)의 성리학 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전해지는 바로는 임상옥은 시재(詩才)가 남달랐으며, 그가 남긴 문집(文集)인 가포집(稼圃集) 등의 시문(詩文)들의 수준이 보통 이상인 것으로 보아 그의 학문적 수준 또한 높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또한 그는 “재물의 평등함은 물과 같아야 하고 사람의 바르기는 저울과 같아야 한다(財上平如水 人中直似衡)”고 했는데, 재화(財貨)는 물(水)과 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전해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노자(老子) 도덕경(道德經)의 상선약수(上善若水) 사상의 영향을 받은 듯하다.

노자의 상선약수의 개념은 노장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자는 최상의 선(善)은 물(水)이라고 하였으며, 물은 모든 생활에 이로우며, 다투지 않고, 낮은 곳을 좋아함으로써 물은 도(道)에 가까우니 인간은 물을 닮은 삶을 살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람은 바르기(直)가 저울(衡)과 같아야 한다(人中直似衡)”라고 했는데, 이는

저울은 속일 수가 없고 저울처럼 사람도 속여서는 안되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의 정직함과 이에 기반한 신용의 중요성을 상업정신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임상옥과 관련해 계영배(戒盈杯)의 일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계영배는 가득 차는 것(盈)을 경계(戒)하는 술잔(杯)의 의미로 잔에 일정 수준의 술이 차면 저절로 술이 비워지는 잔이다.

계영배는 고대 중국에서 제사용으로 만들어진 의기(儀器)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도 화순 출신의 조선시대 실학자 하백원(河百源·1781년~1844년)이 제작 방법을 그의 친구 도공(陶工) 우명옥에게 전해쳐 계영배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참고로 일부 문헌에서는 하백원이 우명옥의 스승이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우명옥은 1771년 생으로 오히려 하백원보다 10년 연상이고, 그의 스승은 따로 지의장으로 전해진다.

강원도 흥천 출신인 우명옥은 조선시대 왕실의 진상품을 만들던 경기도 광주 분원(分院)에서 설백자기(雪白磁器)를 만들어 순조의 치하를 받으며 명성을 얻게 되어 부를 모으자 방탕한 생활로 재물을 모두 탕진한 뒤 잘못을 뉘우치고 스승에게 돌아와 이 계영배를 만들어 바쳤다고 한다.

임상옥은 평생 이 계영배를 곁에 두고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교훈을 되새기며 과욕을 경계했다고 한다.

문득 필자에게도 늘 곁에 두고 경계하는 삶을 위한 계영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기고



설 정 환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대표이사

2015년 겨울, 필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을 마무리하고 권은희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광주 광산구의 현황을 처음 들여다본 그 시절,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치안의 빈틈이었다.

첨단산업단지와 첨단산업단지가 밀집해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첨단지구가 북구와 광산구 경계에 걸쳐 있었지만, 정작 이 지역은 광산경찰서와 북부경찰서 모두의 사각지대였다. 치안 공백이 불 보듯 뻔했다.

그 무렵 전국적으로 신도시와 대규모 개발지의 치안 수요가 급증하며 경찰서 신설 논의가 잇따랐다. 광주 첨단지구도 후보지에 올랐지만, 우선순위가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2016년 5월 신안군에서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파장은 광산구에도 미쳤다. 당시 북구와 광산구 인구는 광주 전체의 6.0%에 육박했다. 두 자치구를 북부경찰서와 광산경찰서가 나눠 맡고 있었지만, 이미 과부하 상태였다.

첨단지구와 하남지구, 중정권역까지 치안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경찰서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2016년 1월 필자는 의원실에 합류하자마자

‘10년째 제자리’ 광주 중부경찰서 조기 건립이 시급하다

정책개발 순위 첫손에 ‘첨단경찰서 신설’을 올렸다. 권은희 의원이 경찰 출신이라는 점과 업무 공감대를 심본 살리면 지역 현안을 푸는 데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같은 시기 북구를 최경환 후보 캠프와도 의견을 조율해 각자 경찰서 관련 공약을 내걸었다. 물밑에서의 전략적 협력이었다.

필자는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광주경찰청과 수차례 자료를 만들고 논리를 다듬었다. 광산구의회에서는 최병식 의원이, 북구의회에서는 이병석·유관운 의원이 각각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치적 드라이브를 걸었다. 2016년 9월 광산구의회, 같은 해 11월 북구의회가 잇달아 ‘첨단경찰서 신설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것이다.

그러나 신안군 사건의 후폭풍은 거셌다. 행정안전부는 “한 해 한 곳의 경찰서 신설도 어렵다”는 완곡한 입장을 고수했고, 2016년에는 신안군만 신설이 확정됐다.

첨단경찰서는 결국 우선 검토 대상에 그쳤다. 대신 2017년 김경진·최경환·권은희 의원이 공동으로 경찰 간담회를 열면서 ‘첨단경찰서’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중부경찰서’로 공론화됐다.

그해 9월 권은희 의원은 2018년 정부 예산에 중부경찰서 설립 사업비를 반영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부지 확보가 발목을 잡았다. 첨단3지구 개발 지연이 경찰서 건립에도 직격탄이 됐다. 당초 2026년 착공·2028년 준공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2027년 착공·2029년 준공으로 늦춰졌다. 총사업비 455억원. 그 사이 광산구와 북구의 치안 공백은 여전히 지역민

의 몫이었다.

올해 8월 기준 북구와 광산구 인구는 약 81만명, 광주 전체의 57%에 달한다. 그러나 이 광활한 지역을 전담하는 광산경찰서와 북부경찰서의 부담은 한계에 다다랐다. 2022년에야 부지 매입 예산 30억원을 확보했으나 착공까지 걸린 시간만 10년이다.

물론 그동안 시장과 정치권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윤창현·이용섭·강기정 시장이 각기 방식으로 사업을 지원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성과는 더뎠다.

올해 22대 국회에서 신정훈 위원장, 양부남 의원이 행안위에 포진한 만큼 이번이야말로 기회를 살려야 한다. 야당 시절과 달리 집권 여당이 된 지금,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광산구민과 북구민은 10년 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말은 선거 때마다 들었지만, 그 약속은 여전히 공사현장의 가림막 뒤에 갇혀 있다.

중부경찰서 청사 신축공사가 올해 하반기 조기착공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준다. 예산과 의지가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부경찰서 건립은 단순한 지역 개발 사업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이자, 광주 서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다.

더 늦기 전에 정치권과 행정이 함께 결단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중부경찰서 조기 건립의 시계추를 당길 때다.

社說

광주에서도 연이은 폭발물 소동 강력하게 대응해야

광주 시민들이 일본 변호사를 사칭한 폭발물 협박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실에 팩스로 관련 내용이 접수돼 경찰이 동구 소재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대해 정밀 수색을 벌인 것이다. 다행히 폭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백화점은 낮 12시를 넘겨서 정상 영업을 시작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한 달전에도 광산구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리겠다는 이메일에 학생과 교직원 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주장한 작성자는 “여성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등 극단적인 혐오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사회적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공권력의 남비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서울에서도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제2경기장)에 폭탄이 있다는 팩스에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지만 허위로 드러났다. 예정된 인기 아이돌 그룹 공연은 2시간을 늦춰 열렸다.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을 폭파할 것이라는 예고 글은 온

라인에 올라와 고객들이 긴급히 벗어나야 했다. 경찰은 중학생과 20대를 각각 제주와 경남 하동에서 검거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혼란을 야기하는 시도다. 인터넷 상 사제 폭탄 제조법이 비밀비재하게 나도는 상황에서 현실이 될지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엄중한 자세로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발본색원해야 한다. 처벌 기준도 재정립해야 한다. 현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백화점 등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는 공공 장소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 폭발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다고 해도 초유의 사태다. 동일범에 의한 소행이 일부 확인되고, 모방 범죄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사 시 대응 공백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다.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더 두고 볼 일이 아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인을 붙잡고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벼랑 끝 위기 여수 석유화학산업 더 방관해선 안돼

김영록 전남지사가 석유화학산업 위기 극복을 국립의대 설립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 한 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건의했다. 전남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 제정, 친환경 공정혁신과 산업 대전환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차세대 전력망 혁신기지 구축’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산업’으로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강원원 경제부지사는 유화단지를 비롯해 동부권을 점검하고 있다. 강 부지사는 여수 묘도 LNG허브터미널 건설 현장을 시작으로 L G화학 여수공장, KCL 방곡·화재안전센터, 상공회의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산업 인프라를 살피고 기업 애로를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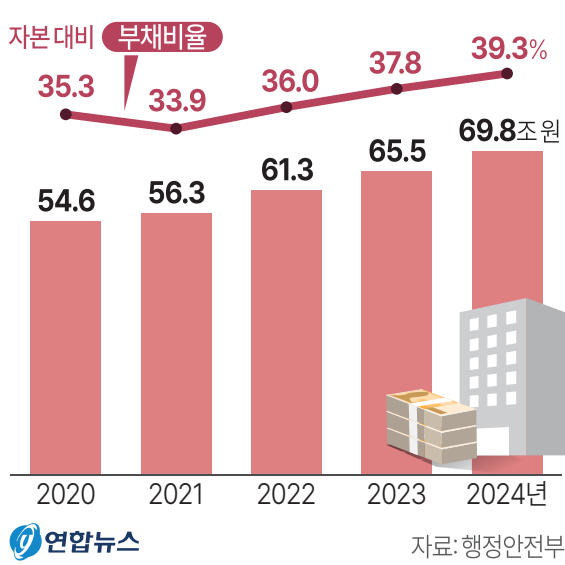
여수 석유화학산업이 벼랑 끝에 섰다. 세계 최대 규모 단일 산단으로 전국 생산량의 1/3 이상을 차지하며, 전남지역 경제와 고용에서 중추 역할을 해왔지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중국발 저가 공세로 인한 공급 과잉 등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된 상황이다. 최근 3년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한

결같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단적으로 선두 주자로 꼽히는 여천NCC가 부도 위기에 직면할 정도다. 간박하게 공동 대주주인 DL그룹의 2천억원 규모 유상증자 결정으로 기사화생의 길이 열렸으나 안심하기엔 이르다고 한다. 급한 불을 끈 것과 별개로 회생을 위한 돌파구를 서둘러 찾아야 하는 처지다. 여천NCC를 포함한 주요 업체마다 일부 생산라인을 중단한 가운데 산업계 전체에 디폴트 공포가 닥치고 있다. 이대로면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풍전등화다. 정부는 여수를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 산지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업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엄중하다.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단기 지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대응이 급하다. 정부 주도로 조속하고 강력하게 구조조정에 착수해야 한다. 각종 규제의 특례도 병행해야 한다. 당면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야 한다.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기간산업이다. 제도약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픽 뉴스

지방공기업부채 추이



연암뉴스

자료: 행정안전부

지자체 지방공기업 부채가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4조원 넘게 늘어 70조원에 육박했다. 지방공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39.3%까지 상승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도 결산 결과, 418개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69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3천억원(6.6%) 늘었다. 부채비율은 39.3%로 1.5%포인트(p) 뛰어올랐다. 자산규모는 총 24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2천억원(3.4%) 증가했다. 지역기업의 자본 증가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자본은 17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손실은 638억원(2.3%) 증가한 2조6천813억원이었다. 상·하수도 지역기업과 도시철도공사가 원가 대비 낮은 요금을 유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418개 공기업은 상·하수도 등 지역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공단 88개다. 상·하수도 기업의 자산은 101조6천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며, 당기순손실은 1천639억원 늘었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6천억원 증가한 10조3천억원이며, 1조2천45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16개 광역도시공사 부채는 3조7천억원 증가한 48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고객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긴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대개 이 한 통의 전화로 시작해 수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피해자는 고령자부터 대학생까지 연령과 직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술적으로 더욱 진화했다. 발신 번호를 공공기관으로 조작하

보이스피싱, 작은 의심이 큰 피해 막는다

는 ‘스푸핑’, 실제 경찰·검찰의 이름과 직위를 도용한 허위 공문, 심지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음성 모사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정교한 수법 앞에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항상 가져야 한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경찰·검찰·금융기관은 전화를 통해 돈을 요구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고 하지 않

는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면 무조건 끊고, 즉시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변 어르신이나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수시로 알려야 한다.

보이스피싱은 모두가 함께 경계하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다. ‘설마’ 하는 순간 평생 저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강민재·정충형철서 장평파출소>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